

[주간동향] 2006. 6. 22~6. 28

한국여성개발원 강민정 전문연구원

- ❖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 연내 제정 추진
- ❖ 여성 취업자 절반 이상 임시·일용·무급직
- ❖ 가정폭력 여전, 특별법 존재도 몰라
- ❖ 지역구 공천 30% 여성할당제 주장
- ❖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 높아

❖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 연내 제정 추진

여성가족부는 출범 1주년을 기념해 21일 브리핑을 통해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계획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담은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가칭)'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 육아휴직제 사용률 등 직장의 가족친화프로그램 활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가족친화지수'를 개발하여, 올 하반기 정부, 기업, 대학 등 2,0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정부·기업의 참여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 발굴과 홍보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모부자 가정(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우선 '모부자복지법'을 개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재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서 2010년까지 150% 이하까지 확대해 올해 3만 1,430명으로 확대했으며, 한국인 자녀와 외국인 한부모로 이뤄진 가족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가족의 주관부처로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결혼이민자가족이 사회문화적 적응 등에 무리가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

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어 초급교재를 3만부 제작·배포하고, 상담전화 1366을 통해 6개 언어로 이민자 상담을 실시하고 이민자 전용쉼터도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호주제 폐지 등 전근대적 차별적 요소들이 많이 개선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이 같은 성과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여성빈곤문제 해결 등에 관해서도 여성가족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여성 취업자 절반 이상 임시·일용·무급직

여성 취업자 가운데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용직·임시직·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성 상용근로자는 262만1천명으로 작년 5월의 242만2천명보다 8.2% 늘어났다. 이런 증가율은 같은 기간 남성 상용근로자 증가폭인 0.2%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여성 취업자 중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는 113만3천명, 1개월에서 1년 사이인 임시근로자는 290만1천명,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140만3천명으로 모두 543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여성 임시·일용·무급직이 전체 여성취업자 989만6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9%에 달했다. 아울러 여성 자영자는 지난 5월 150만9천명에 달했다. 자영자는 자영업주와는 달리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형태로 상당수가 노점상을 비롯한 생계형이다.

한편 남성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는 122만1천명, 임시근로자는 229만1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5만8천명으로 모두 367만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임시·일용·무급직의 경우 전체 취업자 1천358만8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0%로 여성보다 훨씬 낮았다.

❖ 가정폭력 여전, 특별법 존재도 몰라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 10명 중 3명꼴로 여전히 배우자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지만, 가정폭력특별법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은 3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6월26일 '폭력 없는 가정-가정폭력 상담법제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8년째를 맞아 시행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35.3%가 남편에게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냈다. 또, 아내에게 매 맞는 남편도 1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응답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을 외부에 알리는 일은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남성은 44.4%로 높았으나, 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남성은 '가정폭력은 가정 내 일이므로 이웃이나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에 대해 20.9%가 동의해 여성(10.1%)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 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 폭력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남성 응답자의 20% 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답해, 10%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여성과 큰 편차를 보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및 경찰의 대응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2.6%는 가정폭력 발생 시 이혼과 자녀교육, 생계 등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신고 시 경찰이 현장에 즉시 출동했다는 대답도 40%에 그쳤다. 신고자 가운데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해 만족했다는 응답은 19.1%였고, 나머지는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와 모욕적인 언사에 불만을 느꼈다고 답했다. 남녀 모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80.2%, 87.2%로 찬성하는 응답이 높았다. 이 중 남성은 성행 교정을, 여성은 재발 방지에 주안점을 둘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연희 가정법률상담소 초빙연구위원은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이혼, 자녀, 생계문제 등이 가장 크다"며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식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생활보호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역구 공천 30% 여성할당제 주장

선출직 공직에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30%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대 정치대학원 김형준 교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31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토론회에서 "현재 권고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지역구 30% 여성공천 비율을 의무사항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당법 31조는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여성공천 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 선거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내리는 한편 준수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나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총수가 78명에 불과해 공천의 절반을 여성에게 준다고 해도 광역의원 가운데 여성비율은 11%에 불과하다며 차제에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5.31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의회 진출이 크게 확대됐으나 여전히 장애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계, 학계, 정부 등에서 여성참여 확대 로드맵을 준비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를 포함한 여성후보자(1천411명)와 여성당선자(528명)가 전체의 11.6%와 13.7%로,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 높아

저출산·고령화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예산에서 보건·복지와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앞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2005-2009년)을 종합,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2009년 24조9천억 원으로 2005년의 18조2천억 원에 비해 36.8%(6조7천억 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문화·관광 분야도 2009년 7조8천억 원으로, 2005년의 5조7천억 원에 비해 36.8%(2조1천억 원)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자체의 경우 주민복지서비스 증대가 단체장의 지지확보를 위해 중요한데다 중앙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를 늘리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많이 주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공공질서·안전(33.3%), 농림해양수산(27.9%), 건설·교통(19.3%), 환경보호(17.6%), 일반공공행정(9.7%), 교육(0.5%) 등 순으로 예산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의 전국 지자체 전체 세입규모는 총계기준으로 722조원으로, 이중 지자체가 지방세 등을 통해 스스로 조달하는 자율재원은 366조원으로 50.7%를 차지했고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조달하는 의존재원은 334조원(46.2%),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해야 할 부족재원은 22조원(3.1%)으로 추산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 11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5%에 근접할 것으로 전제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